

13일 멈춘 시내버스...광주 준공영제 구조적 한계 드러내

2007년 도입...매년 재정지원 증가 업체 경영 책임 부재 등 문제 노출 8년째 동결된 요금 인상 필요성도 시 "대중교통 정책 전반 개편 논의"

광주광역시 시내버스 파업이 13일 만에 종료됐다. 파업으로 중단됐던 시내버스 운행은 지난 21일 첫차부터 전면 정상화됐지만, 지난 2007년 도입된 광주형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광주 시내버스 노사 대표는 지난 20일 광주시청 3층 접견실에서 강기정 시장의 중재로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3% 인상 △정년 61세에서 62세로 연장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의 노사 공동 참여 △혁신회의에서 근로자 처우 개선과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구조 개선 논의 등이 포함됐다.

강 시장은 같은 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쟁의 행위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시민의 불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합의 내용의 중재안'을 노사 양측에 제안했다. 이후 중재안이 수용되면서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을 끝내고 21일부터 전 노선에 대한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다툼을 넘어, 광주시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시내버스 운영 체계인 '준공영제'에 대한 근본적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박상복(왼쪽) 광주지역버스 노동조합 위원장, 임동춘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7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민간이 운영하되 적자는 광주시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수익성이 낮은 지역에도 노선을 유지해 교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공공 목적의 제도지만, 그간 운영 효율성과 재정 투명성 문제, 버스업체 경영 책임 부재 등 다양

한 지적이 반복돼 왔다.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2007년 196억원, 2014년 445억원, 2020년 1162억원에 달했으며 지난해 1402억원까지 치솟았다. 2007~2024년까지 지급한 총 재정지원금은 1조2075억원이다.

반면 광주시의 채무는 갈수록 늘고 있

다. 2024년 본예산 기준 광주시 지방채 규모는 2조700억원으로, 시민 1인당 147만원 이상의 부채를 짊어진 셈이다. 채무 비율은 23.1%로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재정 부담이 커지는 와중에도 광주 시내버스 요금은 전국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광주의 성인 기준 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이후 1250원에서 8년째 동결 상태다. 서울(1500원), 부산(1550원), 대구(1500원), 인천(1500원) 등 타 특광역시와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물가와 인건비, 유류비 상승을 고려할 때 요금 구조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광주 시민들도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광주시가 최근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 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시민 5342명 중 58.6%가 운전원 임금 3% 인상안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요금 인상에도 62.2%가 250원 인상(1500원 수준)에 찬성했다. 요금 인상 시점으로는 2026년 상반기(43.2%)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광주시는 '(가칭)대중교통혁신회의'를 조속히 구성해 요금 조정, 노선 효율화, 적자 감축, 운전원 처우 개선 등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 논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준공영제를 유지하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중교통혁신회의를 구성해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임금 및 처우 개선 준공영제 전반에 대한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성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광주시, '골목상권 살리기' 공공배달앱 활성화 박차

강 시장 주재 '골목경제 상황회의' 가맹점 할인·운영사 프로모션 강화 정부에 할인쿠폰 등 국비 매칭 요청

광주광역시가 지역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2차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열어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방

안을 논의했다.

이번 상황회의는 강기정 시장 주재로 열렸으며,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전성호 신한은행 '땡겨요' 사업단 대표, 하재욱 슈퍼커넥트(위메프오) 대표, 이기성 광주소상공인연합회장, 이은행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부 회장, 이영숙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지회 회장, 황지훈 다르다김밥 수원점 대표 등 공공배달앱 가맹점과 운영사, 소상공인, 소비자단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광주공공배달앱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프로모션 확대, 가격 할인 등 공공배달앱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공공배달앱 활성화가 특정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어렵다는 데 공감하고 가맹점, 운영사, 소상공인, 소비자단체 등이 각자의 영역에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가맹점은 가격 할인 동참을 통해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공공배

달앱 운영사는 회원·입점업체 확대를 위해 TV 등 온라인 광고와 함께 배달가방 스티커와 현수막 무제한 제공 등 자체 프로모션을 확대해 사용자 유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소상공인 및 소비자 단체는 공공배달앱 이용 캠페인을 벌여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광주 공공배달앱은 신한은행 '땡겨요'와 '위메프오'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1만5800여 개 가맹점, 누적 주문 198만건, 누적 매출액 488억원을 올렸다.

강 시장은 "공공배달앱은 단순한 배달 앱을 넘어 소상공인 보호와 골목경제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민생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있어 가장 시급한 것은 국비 지원 등 재원 확보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국비 지원을 꾸준히 건의해 이미 정부 1차 추경에 국가 직접 사업비 650억원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국가 직접 사업비로는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한계가 있어, 광주시는 정부 2차 추경에 지자체 실정에 맞는 할인쿠폰 발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국비 매칭(50%) 지원을 추가로 요청할 계획이다.

정성아 기자

광주 시내버스 광고

全南日報 와 (주)가온엔 이 함께합니다.

- 연간이용객 3백 90만명
- 차량 인가대수 1,040대
- 운행노선 101개 (급행 6개 | 간선 31개 | 지선 64개)
- 광주버스 1일 왕복 횟수 7~9회

문의 전화 | 062-366-5002

차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 (현대/대우)



인도면 대형·중형 (현대/대우)



후면 대형·중형·저상·좌석버스·전기차 (현대/대우)

